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오 수 호*

Adaption Process of Migration and Reality of Households Heading to Farming

Oh, Soo-H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를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귀촌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이 어떤 동기과 특성을 갖고 귀촌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귀촌동기는 경제외적 사유가 주를 이루며, 귀촌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로 나타났다. 귀촌자금은 초기영농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영농생활 시 가장 큰 도움과 영농 지식과 기술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이웃 독농가였다.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농촌 거주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영농자금조달과 소득수준이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향후 농촌생활방향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여 미래의 농촌현실은 밝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향과 특성을 기초로 세밀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의 정착방안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귀촌, 도시민의 농촌지향, 귀촌자금, 영농기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plan on migration policy based on features, through analyzing the migration adaption process and the farming life of the back-to-countryside population throughout the nation. For this,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find out urban-to-rural migrants' motives and characteristics. The major reason for the migration was the household's financial condition, and the most of migration decisions were made by either one's spouse or parents. The migration fund was primarily spent in early agricultural activities and it was the neighbors who aided them the most whilst teaching them many farming techniques. Some government-supported policies are being highly demanded regarding the lower level of income (than urban life) and difficulties of raising cultivation funds; these two things are what migrants consider as the most inconvenient and suffering matters in farming life. Many surveyee have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stantly stay in the rural area and continue on their life as a farmer, giving a promising prospect for future farmland life. Based on these trends and features, development strategy regarding elaborate settlement plan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necessary.

Key Words: migration, urban-to-rural migration, migration fund, farming technique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농어촌은 급속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구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미약하지만 도시민의 농촌지향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도시민의 농촌지향현상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농업인력 충원과 활력소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는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지향 인구이동은 도시중심의 생활에서 탈도시로

의 변화, 인구구성의 불균형 완화,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변화 등 다양한 공간적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오수호, 2011). 특히 산업구조의 편향적인 발전을 지양하게 하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며(박공주 등, 2006), 귀농은 영농을 통해 정착하려는 일종의 새로운 직업선택 과정이다(김성수 등, 2004). 최근의 귀농은 도시생활 염증과 농촌경관 및 환경을 중시하는 웰빙(Well-Being)의 하나인 새로운 삶의 형태(박은경, 2008)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귀농은 일부 도시민들만의 관심사항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으로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가들은 생태위기극복과 지구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수료(Completed Ph.D.,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yksuho@hanmail.net)

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지향은 정부의 각종 농촌이주 장려정책과 경제위기로 나타난 실업대책 방편 및 생태적 환경에 대한 도시민들의 선호 때문으로 여겨진다. 도시민의 농촌지향은 환경오염, 고물가 등의 도시 추출요인(pushing factors)과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적은 생활비 등의 농촌 흡인요인(pulling factors)(서규선·변재면, 2000)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에서의 사회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농촌의 변화 또한 귀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재홍, 1998).

최근 도시민의 농촌지향은 경기침체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의 은퇴, 주5일제 시행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웰빙족들에 의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도 귀농·귀촌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귀농·귀촌 종합대책(2010)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농업인턴제 및 컨설팅지원, 주택문제 해결지원, 농업 창업자금 및 정착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도 다양한 조례 및 규칙 제정으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정부를 비롯한 귀촌관련기관은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요구에 알맞은 장기적 안목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유인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촌과정과 영농실태가 기존 연구와 어떠한 변화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귀촌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설문결과 나타난 여러 현상 중 시기별, 유형별 현황과 인구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설문의 질문지는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질문내용 이외에 본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첨가하여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전국에 편재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 7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과 방법은 2011년 8월 10일~8월 31일에 걸쳐 우편조사와 웹하드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중 367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이 51.1%에 이르렀고, 17명은 주소지 변동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다.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50%를 넘어 나름의 귀촌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전국의 의견을 대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3) 연구동향

신윤철 등(1998)과 구분석(1999)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영농적응을 위해서 정착자금지원, 귀농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구분석은 귀농 초에는 귀농상담창구의 내실화, 지도체제구축방안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귀농 이후에는 특화된 영농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성수 등(2004)의 연구는 성공적인 귀촌적응을 위해 귀농단계별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개인적 준비와 교육, 지원,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농정착과정을 농업특성 파악과 검토·분석·탐색 후 토지, 자본 등을 투자하여 자립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서만용·구자인(2005)은 귀농자들의 농촌적응과정연구에서 귀농선택과정에는 삶의 질 가치추구가 중요한 변인이며, 귀농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박공주 등(2007)은 귀농인의 귀농유형별 농촌이주준비과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 농촌이주준비과정에서는 요인별로 귀농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농촌적응과정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귀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영농자금확보, 영농이해와 철저한 준비, 확고한 신념, 귀촌지역선정, 농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2. 귀촌 가구주의 특성

1) 인구적 특성

인구적 특성(표 1)은 성별은 남자(84.2%)가 대부분으로 이는 귀촌가계의 가장(家長)인 남성이 주로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이동 의사결정과 목적지의 선택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이동량과 이동지역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정환영, 2008). 이주패턴의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며(Johnson, K. M. and Fuguitt, G. V., 2000), 연령의 변천은 폭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Amcoff, J. and Westholm, E., 2007). 연령별 분포는 50대(43.6%)가 가장 많고, 40대(36.2%), 30대(13.1%), 60대 이상(7.1%)순이다. 이를 농림수산식품부(2010년)의 귀촌자 연령별 분포와 비교하면 50대(35.8%)가 가장 높고 40대(30.2%), 60대 이상(18.9%), 30대(13.6%), 29세 이하(1.5%)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총 귀촌자(1990년~2010년)의 연령별 분포는 30대(33.2%)가 가장 높고 다음 40대(28.9%), 50대(20.5%), 60대 이상(10.0%), 29세 이하(7.4%)순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젊은 층인 30~40대(49.3%)가 절반으로 이들은 상당한 정도의 교육수준과 다양한 직장경험자로 추정되어 침체된 농촌의 발전과 활력을 이룬다. 20대가 전무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대학진학으로 학업지속기간이 길어졌으며, 군복무 이후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도시의 비정규직근로자로 생활하는 등 심한 농촌 기피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농업 전망은 비관적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50대 이상(50.7%)은 도시경험과 1억원 이상(29.2%)의 귀촌자금을 가진 경제적 여유자나 연금 생활자로서 양

질의 인적자본으로서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Stockdale, 2006)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특성

가구주의 사회적 특성(표 2)을 보면 거주지는 산간농촌(56.4%), 농촌평야(24.0%)순인데 비해 구분석(1999)의 연구는 정반대로 농촌평야(42.6%), 산간농촌(33.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형태의 변화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 해안과 도서지역(7.3%)은 매우 낮는데 이처럼 귀촌지의 농촌편중현상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을 야기한다.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농촌지역은 도시민의 역이주 현상이 나타난다(Copus et al., 2006). 도시근교거주자(12.3%)는 주로 영농 보다는 도시근로자로서 생활하는 귀촌자로 보이며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며 목가적인 전원생활 및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입된 경우로 보인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37.3%)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들(신윤철 등, 1998; 조창완 등, 2007; 고성준, 2008; 박은경, 2008)과 같은 결과를 보이며, 중졸이하는 11.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인 전문대학 이상(51.5%)은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군인 등의 비율(46.1%)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의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면 미래의 농촌비전은 희망적일 것이다. 김철규 등(2011)의 연구도 귀농귀촌 유형 중 대안가치추구형의 절반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은 과거 전문직 종사자나 농촌사회개선을 위한 활동가들은 마을 발전에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1. 인구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309 (84.2)	연령	40대	133 (36.2)
	여	58 (15.8)		50대	160 (43.6)
	계	367 (100)		60대 이상	26 (7.1)
연령	20대	0 (0.0)		계	367 (100)
	30대	48 (13.1)			

귀촌 시 동반가족은 전가족 모두(49.6%)가 절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가족간 서로 든든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귀촌생활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 가족이 함께 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의 성공적 변화에 더욱 동의한다(김철규 등, 2011). 50대 이상(50.7%)은 고령화 부부를 중심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업부문의 취업자의 고령화를 초래해 영농위탁현상의 전망을 보여준다. 부부가 함께 귀촌(27.5%)한 경우는 영농활동을 통한 전원생활과 건강목적으로 보여지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승덕, 1996). 홀로 귀촌(21.0%)한 경우는 미혼 또는 가족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자녀 교육문제, 여자(15.8%) 등으로 여건상 혼자 귀촌한 경우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 중 가족동의를 얻지 못하고 홀로 귀촌한 경우 귀촌기간이 장기화할수록 가족해체의 위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원만한 귀촌생활을 위해서는 ‘가족동의’(신윤철 등, 1998; 이재철·이도선, 2006; 박공주 등, 2007; 김철규 등, 2011)는 물론 친·인척의 동의와 협조(이재철·이도선, 2006)도 필수요소로 여겨진다.

귀촌시기는 대체로 5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보여 1997년 IMF 이전시기와 그 이후는 5년 간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농림수산물부의 자료(2010)에 의하면 1990년~2010년 기간 중 귀촌급증시기가 1997년 IMF 직후와 2008년 9월 미국발(發) 경제위기 이후 2차례로 나타난 것처럼 설문 결과도 이와 같게 나타났다. 즉 1989년~1996년은 1.8%에 불과하였으나 IMF 직후인 1997년~2001년(7.0%)에 귀촌이 급증하였다. 이후 2000년~2003년까지 지원체계부족 및 정착교육부재 등의 이유로 영농정착에 실패해(조창완 등, 2007)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점차 귀촌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2011년 8월 현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가 급증(67.3%)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귀촌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으로 추측된다.

귀촌지역은 고향(45.2%), 타향(54.8%)으로 나타나 연고지인 고향으로 대부분 귀촌한다는 연구들(박영일, 1998; 강대구, 2006; 조창완 등, 2007; 고성준, 2008)과는 달리 무연고지로 귀촌한 경우(박은경, 2008; 김철규 등, 2011)가 많았다. 이는 귀촌 시 주변자연경관, 도시와의 접근성 고려와 정서상 선호지역, 질병치료 목적 등 다양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비농업부문의 흡인요

표 2. 사회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현 거주지	도시근교 (시, 읍 소재지)	45 (12.3)	동반 가족	전가족 모두	182 (49.6)
	산간농촌	207 (56.4)		부부만 둘이서	101 (27.5)
	농촌평야지역	88 (24.0)		본인 혼자서	77 (21.0)
	해안지역	17 (4.6)		기타	7 (1.9)
	도서지역	10 (2.7)		계	367 (100)
	계	367 (100)	귀촌 시기	'89 - '96	6 (1.8)
학력	초등졸	7 (1.9)		'97 - '01	26 (7.0)
	중졸	35 (9.5)		'02 - '06	88 (24.0)
	고졸	137 (37.3)		'07 - '11.08.	247 (67.3)
	전문대졸	71 (19.3)		계	367 (100)
	대졸	94 (25.6)	고향 여부	고향	166 (45.2)
	대학원졸	23 (6.3)		타향	201 (54.8)
	계	367 (100)		계	367 (100)

인의 결과로 다양한 귀농배경과 경로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귀농유형(U/J/I-turn 유형)중 J-turn유형과 I-turn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경제적 특성

가구주의 경제적 특성(표 3)을 보면 귀촌 전 직업은 자영업(41.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회사원(27.2%), 전문직(12.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불경기와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때문으로 농업을 실업의 방편으로 여기며 또한 웰빙 목적의 생태적 귀촌의 성격을 가진 은퇴자나 조기퇴직자 층인 것으로 보인다. 전직이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이 전체의 84.2%로 이들의 다양한 직업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전문지식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종사하였던 직업에 비춰보아 귀촌성격은 능동적, 창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영농생활과

표 3. 경제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귀촌 시 직업	공무원	12 (3.3)	귀촌 시 직업	생산직	7 (1.9)
	회사원	100 (27.2)		주부	23 (6.3)
	전문직	45 (12.3)		실직	1 (0.3)
	자영업	152 (41.4)		퇴직	4 (1.1)
	군인	12 (3.3)		기타	5 (1.4)
	노무자	6 (1.6)		계	367 (100)

표 4. 귀촌동기

(단위: 명)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1 순위	밝은농업전망	43 (11.7)	2 순위	노후대비	23 (6.3)
	가족권유	22 (6.0)		막연한 생각	9 (2.5)
	영농승계목적	23 (6.3)		동호인과 거주	3 (0.8)
	사업실패, 실직	44 (12.0)		이상적인 삶	27 (7.4)
	도시생활염증	53 (14.4)		기타	0 (0.0)
	건강관리목적	39 (10.6)		계	367 (100)
	쾌적환경	28 (7.6)		3 순위	밝은농업전망
	노후대비	41 (11.2)	가족권유		10 (2.7)
	막연한 생각	2 (0.5)	영농승계목적		14 (3.8)
	동호인과 거주	0 (0.0)	사업실패, 실직		10 (2.7)
	이상적인 삶	64 (17.4)	도시생활염증		48 (13.1)
	기타	8 (2.2)	건강관리목적		49 (13.4)
	계	295 (100)	쾌적환경		72 (19.6)
	2 순위	밝은농업전망	25 (6.8)	노후대비	56 (15.3)
가족권유		25 (6.8)	막연한 생각	19 (5.2)	
영농승계목적		17 (4.6)	동호인과 거주	4 (1.1)	
사업실패, 실직		20 (5.4)	이상적인 삶	46 (12.5)	
도시생활염증		68 (18.5)	기타	13 (3.5)	
건강관리목적		66 (18.0)	계	367 (100)	
쾌적환경		84 (22.9)			

소득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도시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이농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퇴직(1.1%), 실직(0.3%) 등 무직업상태에서 귀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귀촌적응과정 및 영농실태

1) 귀촌동기 및 영농정책과정

귀촌동기를 3순위까지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4), 귀촌동기 1순위는 이상적인 삶(17.4%), 도시생활염증(14.4%), 사업실패, 실직(12.0%)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쾌적한 환경(22.9%), 도시생활염증(18.5%), 건강관리목적(18.0%)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2순위와 같이 쾌적한 환경(19.6%), 노후대비(15.3%), 건강관리목적(13.4%)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시기에 따라 귀촌 동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귀촌자들의 성공과 만족여부는 귀촌 동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귀촌 이유가 생태적 동기인 이상적인 삶과 쾌적한 환경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귀촌동기를 경제적 이유라고 분석(우종현, 1997; 김형용, 1998; 임혜영, 1999; 정한모, 2002; 서만용·구자인, 2005; 조창완 등, 2007)한 것과는 달리 귀촌동기를 인간다운 삶(정지웅 등, 2000; 김성수 등, 2004; 강대구, 2007; 고성준, 2008)과 쾌적한 환경(박영일, 1998)으로 파악한 연구와 같았다. 이는 농촌 및 도시민의 농촌지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시대상으로 적응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대구(2005)는 연구에서 귀농동기가 인간다운 삶의 경우 농업에 대한 인식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귀

농정보원에서도 매스컴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웃독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특이점은 귀촌사유 중 '동호인과의 거주'는 거의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건상 시기상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귀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표 5)은 배우자(33.2%)가 가장 많아 박은경(200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다음으로 타인 중에는 부모(19.3%)가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13.4%), 형제(7.9%)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부모형제가 60.4%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가족들의 노력과 합의가 영농성공정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농업관련 공무원과 직원(1.6%) 영향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농업관련기관 특성상 법과 형식에 얽매어 정형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기타(24.5%)는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귀촌한 경우였다.

귀촌초기 및 이후에 영농자금조달이 귀촌의 성공적 정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김성수 등, 2004)이라고 하였다. 귀촌 시 이주자금(표 6)은 3천만원 이하(32.2%)가 가장 많고 다음이 1억원 이상(29.2%)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귀농초기투자비용이 평균 6,251만원이 투자되었다(조창완 등, 2007)는 사실에 비춰보아 5천만원 미만(49.1%)인 경우에는 투자자금부족으로 영농소득이 2천만원 미만(66.8%)으로(표 21) 생계유지를 위해 이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류로 분류된다. 이는 이

표 5. 귀촌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선후배	농업관련 공무원, 직원	기타	계
빈도(%)	71(19.3)	122(33.2)	29(7.9)	49(13.4)	6(1.6)	90(24.5)	367(100)

표 6. 귀촌 자금

(단위: 명)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1억 이하	1억 이상	계
빈도(%)	118(32.2)	62(16.9)	32(8.7)	48(13.1)	107(29.2)	367(100)

들이 고용기회를 농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귀촌생활을 위해서는 귀촌탐색 및 준비과정의 철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김철규 등(2011)의 연구는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귀촌은 약 2~3년의 도시에서의 준비과정과 3~5년의 귀농지에서의 정착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서만용·구자인, 2005). 반면 정착자금에 7천만원 이상(42.3%)의 비교적 여유 있는 집단이 많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금 못지않게 귀촌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귀촌 정착의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영농정착자금의 출처는(표 7), 본인의 전 거주지 자산 처분(62.7%)이 대부분이며 다음이 퇴직금(14.7%)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이정관, 1998; 김성수 등, 2004; 박은경, 2008)와 같았다. 즉 정착자금이 7천만원 이상(42.3%)은 자산처분이나 퇴직금 등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은행대출이나 사채(11.4%)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자금 성격은 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권 융자 비율이 낮은 것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조건 때문으로 사료된다. 귀촌은 주거지와 전반적인 생활 변화로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정착자금을 통한 귀촌이 이루어졌지만, 만일 귀촌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의 커다란 상실감은 물론 다른 귀촌자들의 귀촌을 저지하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속재산(3.8%)이 가장 낮은 것은 귀촌동기 1,2,3순위에서 영농승계목적의 각각의 응답(각각 6.3%, 4.6%, 3.8%)의 반응으로도 잘 나타나 보인다. 기타는 직장생활을 통해 마련하거나 저축 등 꾸준한 계획을 통하여 준비한 경우가 많았다.

귀촌자금 사용처를 우선 순위를 정해 3순위가 지 적어보도록 하였다(표 8). 그 결과 1순위는 농지와 가축구입비용(35.1%), 2순위는 영농시설자재구입(22.3%), 3순위는 생활비(28.1%)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이 주로 귀촌초기 영농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 속성상 3~4년 후에야 소득이 창출되므로 그동안의 생활비를 귀촌정착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안정된 가계유지비용의 확보여부가 성공적인 귀촌생활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과 신축비용도 1, 2순위에서 각각 31.6%, 21.8%로 나타나 귀촌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보제공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의료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건강을 중요한 귀촌동기로 여긴 연구들(신정수·이병오, 1999; 박공주 등, 2006; 박은경, 2008)처럼 건강한 상태로 귀촌한 경우로 보이며, 생활만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교육비율(0.8%)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만, 본인 홀로 귀촌한 경우(48.5%)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귀촌자금 조성 방법

(단위: 명)

구분	퇴직금	은행대출, 사채	상속재산	전거주지의 자산처분	기타	계
빈도(%)	54(14.7)	42(11.4)	14(3.8)	230(62.7)	27(7.4)	367(100)

표 8. 귀촌자금 사용 순위

(단위: 명(%))

구분	농지, 가축구입	주택구입, 신축비용	영농시설 자재구입	농기계 구입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비용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	기타	계
1순위	129 (35.1)	116 (31.6)	59 (16.1)	22 (6.0)	22 (6.0)	1 (0.3)	12 (3.3)	3 (0.8)	3 (0.8)	367(100)
2순위	56 (15.3)	80 (21.8)	82 (22.3)	26 (7.1)	55 (15.0)	12 (3.3)	43 (11.7)	13 (3.5)	0 (0.0)	367(100)
3순위	20 (5.4)	12 (3.3)	68 (18.5)	74 (20.2)	56 (15.3)	10 (2.7)	103 (28.1)	22 (6.0)	2 (0.5)	367(100)

표 9. 영농생활 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부모	형제	친구, 선후배	농업관련 기관직원	행정기관 직원	이웃 독농가	기타	계
빈도 (%)	52 (14.2)	35 (9.5)	61 (16.6)	58 (15.8)	13 (3.5)	105 (28.6)	43 (11.7)	367(100)

영농생활 시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을 보면 (표 9), 이웃 독농가(28.6%)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들(신윤철 등, 1998; 강대구, 2006; 박은경, 2008; 김철규 등, 2011)과 같았다. 즉 성공적인 귀촌조건으로 인간관계 증진의 중요성(고성준, 2008)과 귀농실행단계에서 농업경영의 중요요소인 경험과 지속적인 영농기술의 학습을 위해 이웃 독농가와 긴밀한 유대(이재철·이도선, 2006)가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경험 많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있는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귀농귀촌인의 성공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보다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과 친화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김철규 등, 2011). 이웃은 거리상 근거리에 있으며 상부상조의 미덕이 아직은 존재하므로 작은 지원은 필요할 때마다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귀촌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래주는 원천이 된다. 박공주 등(2007)은 연구에서 이웃도움의 수혜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이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도구적, 정서적 도움이고, 경제적 도움은 평균 이하인 것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16.6%), 농업관련기관 직원(15.8%), 부모(14.2%), 형제(9.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 직원(3.5%)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귀촌인 접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귀촌초기의 귀농상담창구 내실화를 강조하였듯이(신윤철 등, 1998; 구본석, 1999) 이를 위해 귀촌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귀촌자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와 귀촌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귀촌교육

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업관련기관 직원의 도움(15.8%)도 높지 않았는데 이는 농업관련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형식적인 업무분장, 귀촌대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변동된 지원정책을 귀촌자는 자주 확인을, 귀촌관련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판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62곳의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지역조례 제정을 통해 귀농·귀촌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송용섭·황대용, 2010), 각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정부차원의 귀촌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영농기술교육 실태

영농초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을 보면(표 10), 조창완 등(2007)의 연구는 영농정보수집경로가 인터넷, 농업관련기관, 친인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농생활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처럼 이웃 독농가(28.6%)로 나타나 인간관계 즉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업관련기관(27.5%), 인터넷(19.3%), 부모, 형제, 친척(11.7%)순이었으며, 전문서적(4.6%)과 매스컴(3.3%)은 낮게 나타났다. 즉 영농지식과 기술은 주로 이웃독농가, 농업관련기관과 정보화의 발달로 대중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스컴의 영향이 낮은 것은 요즘 각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편집과 편성이 주로 오락과 스포츠게임 위주의 구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표 10. 영농초기 지식과 기술 습득

(단위: 명)

구분	매스컴	인터넷	농업관련 기관	행정 기관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독농가	전문 서적	기타	계
빈도 (%)	12 (3.3)	71 (19.3)	101 (27.5)	6 (1.6)	43 (11.7)	105 (28.6)	17 (4.6)	12 (3.3)	367(100)

표 11. 영농기술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계
빈도 (%)	314(85.6)	53(14.4)	367(100)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을 통해 얻은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귀촌 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영농기술교육의 필요성(표 11)을 보면 교육받기를 원한다(85.6%)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재철·이도선(2006), 조창완 등(200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것은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문제를 영농생활 중 가장 큰 애로사항(28.3%, 표 16 참조)으로 높게 응답한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새로운 영농기술욕구가 매우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농기술교육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귀촌자가 존재하므로 수준별로 차별화된 연계 교육과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귀촌관련기관에서는 영농기술교육이 소모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이수생과의 정보소통과 지속적인 영농상담 등의 사후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서 귀촌자들의 기술교육요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걸맞는 세분화된 영농기술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시대를 맞아 농산물시장도 급속하게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영농기술교육을 원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표 12), 1순위는 과수(22.0%), 경종(17.5%)순이었다. 과수는 넓은 경지규모와 자본회수기간이 긴 작목으로 이는 부모의 영농승계

(6.3%)나 귀촌 시 영농자금이 1억원 이상(29.2%)인 비교적 여유로운 층이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식량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재배기술이 비교적 쉬운 경종교육을 원하였다. 이는 농지가격 상승(김재홍, 1998; 임혜영, 1999)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2순위는 약용작물(21.3%), 특용작물(18.8%)순이었으며 3순위는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이 각각 27.7%, 18.5%로 2순위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작물재배 속성상 산간농촌거주자(56.4%, 표 2)에게 유리한 작물로 다른 작물에 비해 높은 재배기술 수준과 약재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지만 웰빙문화 확산 및 고소득작물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진흥청(2010)은 '체험형 약초교육'을 1일 과정으로 운영하며, 약초기술교육으로 실습, 견학 등 현장중심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운영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송용섭·황대용, 2010). 반면 낙농(0.6%)은 가장 낮았다. 이는 가격의 불안정, 수입사료 가격 급상승 등 축산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1년 초 우리나라 축산농가 전체를 존폐위기로 몰아넣었던 구제역은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추워지기 이전에 농립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은 철저한 구제역 대비 조기방역체제를 갖춰 앞서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영농기술교육을 원하는 경우 교육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표 13), 1주일 이내(52.6%)

표 12. 영농기술교육 요구 분야

(단위: 명(%))

구분	경종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양잠	한우	화훼	채소	과수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	계
1순위	55 (17.5)	2 (0.6)	6 (1.9)	13 (4.1)	6 (1.9)	3 (1.0)	48 (15.3)	9 (2.9)	26 (8.3)	69(22.0)	28 (8.9)	45 (14.3)	4 (1.3)	314(100)
2순위	26 (8.3)	0 (0.0)	4 (1.3)	10 (3.2)	20 (6.4)	2 (0.6)	29 (9.2)	9 (2.9)	51(16.2)	35(11.1)	67(21.3)	59(18.8)	2(0.6)	314(100)
3순위	33 (10.5)	2 (0.6)	0 (0.0)	2 (0.6)	19 (6.1)	2 (0.6)	17 (5.4)	20(6.4)	26 (8.3)	42(13.4)	58(18.5)	87(27.7)	6(1.9)	314(100)

표 13. 영농기술교육기간

(단위: 명)

구분	1~2일	3~4일	1주	2주	1개월 이상	계
빈도(%)	26(8.3)	59(18.8)	80(25.5)	42(13.4)	107(34.1)	314(100)

가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는 34.1%로 나타났다. 즉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연구(이재철·이도선, 2006)와는 달리 1주일 이내의 단기간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중 영농활동으로 매우 바쁘므로 농한기를 이용한 단기간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영농실습교육 시 이론위주 교육 보다 연속·체계적인 선도농가 현장방문 및 실습(이재철·이도선, 2006; 조창완 등, 2007)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철영(1998)도 귀농교육훈련의 교육방식연구에서 이론위주의 강의식위주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며 실습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론교육 시 형식적 교육과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은 지양하고, 귀촌자 대상의 '수준별 교육프로그램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농기술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표 14), 필요한 과목이 없으며, 벌써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62.2%로 나타났다. 즉 바쁘거나(20.8%) 교육을 받기가 귀찮은 탓(11.3%)도 있지만, 부실한 교육내용과 영농기술교육이 획일적이며 이론중시교육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농부들의 영농 경험담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교육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농부들의 영농 경험담에 의존하는 것은 농부마다 영농기술이 상이하므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수준별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영농과목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개설된 교육과정은 지속적

인 교육내용개선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바쁘거나 귀찮아서 기술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32.1%)는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고취와 함께 영농비용절감과 급변하는 농업정세의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영농기술은 일시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농기술습득을 위해서는 농촌으로 유인된 사람들에게 영농기술과 지식을 정착자금지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철영, 1998). 또한 귀농인만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부설 귀농교육센터 운영 혹은 대학위탁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이재철·이도선, 2006), 관련농장이나 농촌진흥청 등의 각종 시설과건을 통한 실습지원과 학점은행제 도입(강대구, 2007)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준 높은 첨단영농기술은 고소득과 연결된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귀촌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영농의 지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영농교육의 이수횟수를 살펴보면(표 15),기회가 없다(35.7%)가 가장 많았다. 이는 바쁜 영농활동 때문이거나 교육이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귀촌안내와 영농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귀촌관과 정확한 영농기술과 정보의 획득기회를 주어 좌절 없는 귀촌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4회 이상 교육이수(30.5%)는 높은 교육욕구를 통해 어려운 귀촌현실을 타개하기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질 높은 영농기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2회 이하(24.8%)의 이수자에게는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업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첨단영농교육으로의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영농 기초지식 이수 등

표 14. 영농기술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이미 교육받음	바빠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과목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귀찮아서	계
빈도(%)	13(24.5)	11(20.8)	20(37.7)	3(5.7)	6(11.3)	53(100)

표 15. 영농교육 이수기회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다	계
빈도(%)	46(12.5)	45(12.3)	33(9.0)	112(30.5)	131(35.7)	367(100)

표 16.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영농 자금 조달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	작목 선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웃 문제	농지, 가축 구입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문제	농기계 구입 및 수리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과다 노동	낮은 소득	생산물 판로 문제	기술 조인자 확보 문제	부모, 배우자 이해 부족	계
1 순위	106 (28.9)	104 (28.3)	10 (2.7)	17 (4.6)	14 (3.8)	23 (6.3)	12 (3.3)	6 (1.6)	16 (4.4)	12 (3.3)	27 (7.4)	6 (1.6)	7 (1.9)	7 (1.9)	367(100)
2 순위	39 (10.6)	55 (15.0)	19 (5.2)	29 (7.9)	20 (5.4)	29 (7.9)	42 (11.4)	19 (5.2)	30 (8.2)	20 (5.4)	38 (10.4)	14 (3.8)	7 (1.9)	6 (1.6)	367(100)
3 순위	29 (7.9)	35 (9.5)	16 (4.4)	12 (3.3)	25 (6.8)	14 (3.8)	39 (10.6)	22 (6.0)	30 (8.2)	26 (7.1)	65 (17.7)	30 (8.2)	17 (4.6)	7 (1.9)	367(100)

의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과 현장실 습교육 등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육에 대한 귀촌자들의 기대와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필요하다.

3) 영농실태

영농생활 중 갖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표 16), 1순위는 영농자금 조달과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각각 28.9%, 28.3%로 같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의 연구결과들(조록환, 1998; 정철영, 1998; 서규선·변재면, 2000; 강대구, 2007)과 같았다. 2순위는 영농기술 및 경험문제(15.0%)로 나타났다. 이재철·이도선(2006)은 연구에서 귀촌인들에게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험전수를 위해 귀농 멘토링 제도의 실시 혹은 귀농지도 전문가 풀의 확보와 운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순위는 낮은 소득(17.7%)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문제와 영농기술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든 귀촌자의 공통적인 관심 사임을 말한다. 이는 현재 농업은 기계와 자본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 영농자금 확보여부가 영농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며 특히 귀촌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 '경제적 이유'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서만용·구자인, 2005)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농자금지원 시 귀농 동거나 적응단계특성에 맞게 일괄자금형태의 지원과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강대구, 2007). 그러나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귀촌의 성공정착에 중요요인이며, 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가

치와 신념의 요인을 중시함을 부각시켰다. 임차농지를 임대인이 계약을 무단과기해 손해를 입어 농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농지문제를 애로사항(6.3%)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확보여부는 귀농지역 결정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소유농지가 부족한 귀촌자를 위해 부채지주농지나 무단 방치된 토지, 국유지 등을 낮은 임대료로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농지임대를 보편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해부족(1.9%)비율은 가장 낮는데 이는 대부분이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하에 귀촌한 결과로 보여진다.

귀촌정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영농생활 중 가장 큰 불편을 느꼈던 점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표 17), 1순위는 소득수준(24.3%), 2순위 편의시설부족(19.3%), 3순위 소득수준(21.0%)으로 나타났다. 즉 1,3순위 모두 소득수준을 꼽아 경제문제를 가장 큰 불편함으로 여겨 조창완 등(2007), 김철규 등(2011)의 연구결과와 같았는데 이는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일치하였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귀촌의 키워드는 소득보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2순위의 편의시설부족문제는 도시에 비해 농촌생활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김형용(1998)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달리 편의시설부족문제를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보았다. 즉 편의시설부족은 물론 자녀교육, 교통 불편, 의료 및 문화적 여건부족 등의 농촌의 하부기반시설문제를 성공적인 농촌정착과 가장 큰 불편한 문제로 기존 연구들(김형용, 1998; 구분석, 1999; 정대영, 2001; 김철규 등, 2011)은 대부분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 설문결과 이에 대한 응답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농촌지역도 지역개발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발된 측면과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부부나 본인 홀로 귀촌한 경우(48.5%)와 취학 전이거나 저학년의 아동을 동반한 30대 중심의 귀촌(13.1%)결과로 보인다. 주민과의 관계(11.4%)도 갈등이 없었다(55.0%)는 응답결과처럼 인간관계도 큰 불편사항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촌자는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귀촌권유여부를 귀촌희망자에게 충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귀촌자가 느끼는 불편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정책이야말로 원활한 귀촌유인의 초석이라고 사료된다.

현재의 영농종사분야(표 18)는 식량작물보다 수익성 경제작물인 과수(2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소(19.6%), 축산(18.5%), 경종(17.4%)순이며 화훼(1.1%)가 가장 낮았다. 이는 영농기술교육을 원하는 분야에서 과수를 1순위로 선택(22.0%)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부분 귀촌 시 경종을 선택한다는 연구들(박영일, 1998; 정대영, 2001; 이재철·이도선, 2006; 고성준, 2008; 박은경, 2008)과 다르게 나타났다. 조창완 등(2007)은 연구에서 비교적 젊고 고학력일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 과수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영농형태에 따라 농업구조는 차이가 있으므로 농업성격과 특성을 알 수 있다. 통계상에 나타난 최근영농형태는 정부가 권장하는 대규모 단일작목농업방식 대신 상업농 및 농업의 다양화와 상응하는 다품종 소규모농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정부농업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와 환금성이 높은 화훼종사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초기 과도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과 수요가 계절적인 요인에 좌우되며 판로확대를 위한 외국으로의 시장개척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작물재배 특성상 교통이 편리한 도시근처가 유리한데 앞서 나타난 도시주변지역의 귀촌비율(12.3%)이 낮으며 더구나 이들의 종사부문이 주로 비농업부문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기존주민과의 갈등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표 19), 갈등이 '없었다'(55.0%)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갈등이 있었음을 밝힌 경우는 45.0%로 나타났다. 이는 귀촌자들이 기존농민과 비교적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귀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영농생활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28.6%)과 영농초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표 17. 영농생활의 가장 큰 불편사항

(단위: 명(%))

구분	자녀 교육	교통 불편	의료 여건	편의시설 부족	문화적 여건부족	주거 환경	주민과의 관계	소득 수준	계
1순위	69 (18.8)	22 (6.0)	42 (11.4)	26 (7.1)	42 (11.4)	35 (9.5)	42 (11.4)	89 (24.3)	367(100)
2순위	29 (7.9)	42 (11.4)	48 (13.1)	71 (19.3)	45 (12.3)	46 (12.5)	33 (9.0)	53 (14.4)	367(100)
3순위	24 (6.5)	38 (10.4)	39 (10.6)	48 (13.1)	71 (19.3)	28 (7.6)	42 (11.4)	77 (21.0)	367(100)

표 18. 영농종사분야

(단위: 명)

구분	경종	축산	화훼	채소	과수	특용작물	기타	계
빈도 (%)	64 (17.4)	68 (18.5)	4 (1.1)	72 (19.6)	88 (24.0)	52 (14.2)	19 (5.2)	367(100)

표 19. 기존농민과의 갈등관계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 (%)	165(45.0)	202(55.0)	367(100)

가장 중요한 루트가 바로 이웃 독농가(28.6%)였다는 똑같은 응답 결과로도 잘 나타난다.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귀촌인은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융화되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귀농자들의 귀농지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은 귀농을 도와준 귀농 매개자와 관련이 있다. 이주자들은 이들로부터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교 등과 같은 공식조직에의 접근에 도움을 받는다(서만용·구자인, 2005).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아 이들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잘 형성하여 귀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안정된 귀촌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표 20), 외지인을 배타시하는 마을분위기(41.2%), 소통부족과 무관심(21.8%), 이질적인 문화요소(20.6%), 경쟁관계인식(9.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만한 인간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즉 건전한 농촌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원주민들은 귀촌자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며, 귀촌자들은 지역사회와의 결합에 힘쓰며 원주민들의 삶의 수준과 영농기술을 존중하는 등의 쌍방의 문화적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 갈등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며 비록 귀촌인들이 주민들

과 갈등한 경험이 있더라도 귀농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과 갈등해결주체로 마을지도자의 역할을 들었다. 기타로 마을일 처리시 공정함 보다는 농촌 특성상 개개인의 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처리되어 갈등을 빚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는 각종 학연, 혈연 등으로 맺어진 농촌의 폐쇄형 문화 때문으로 여겨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의 시정은 더 많은 귀촌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영농활동을 통한 연간소득(표 21)은 1천만원 미만(42.8%)이 가장 많았고, 1천만원~2천만원미만(24.0%), 3천만원~5천만원 미만(13.4%)과 2천만원~3천만원 미만(13.1%)은 거의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연간소득이 1천만원~3천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면 서만용·구자인(2005)과 조창완 등(2007)의 연구는 조사시기의 차이는 보이지만 각각 연평균소득조사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각각 2천만원 이하와 1,611만원)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영농수입이 영세한 2천만원 미만은 전체의 66.8%로 영농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영농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1,3순위로 각각 소득수준(각각 24.3%, 21.0%)을 응답한 결과로도 잘 나타나 보인다. 이는 영농기술능력과 투자자금 부족, 아직은 영농투자단계로 인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잦은 재해 등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본업으로 농업이 아닌 농

표 20. 갈등 이유

(단위: 명)

구분	외지인에 대한 배타 의식	농산물판로 문제	소통 부족, 무관심	경쟁 관계 인식	이질적 문화 요소	주거지 선정 및 농가 주택 모양	금전적 문제	기타	계
빈도 (%)	68 (41.2)	3 (1.8)	36 (21.8)	15 (9.1)	34 (20.6)	4 (2.4)	4 (2.4)	1 (0.6)	165(100)

표 21. 영농생활을 통한 연간소득

(단위: 명)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빈도 (%)	157 (42.8)	88 (24.0)	48 (13.1)	49 (13.4)	19 (5.2)	6 (1.6)	367(100)

업이의 직업에 종사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탈농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1억원 이상의 고소득(1.6%)은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고소득 작물재배 이외에 펜션 등 관광객 대상의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구본석(1999)의 연구는 소득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장 높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김철규 등(2011)은 소득수준별 귀촌에 대한 성공도 인식조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3천만원 이상)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1천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성공도 인식은 낮고, 실패도 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귀촌자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또 다른 농촌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저소득 귀촌자의 농가소득 증진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즉 이들에게 첨단영농기술교육확대와 영농자금 적기제공, 기후조건을 고려한 작물재배유도 등을 통해 소득향상을 이룰 때 안정적인 귀촌생활축진과 소득격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영농정착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정부지원책을 살펴보면(표 22), 김성수 등(2004)과 김철규 등(2011)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영농자금지원이 4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영농생활 중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서도 1순위가 영농자금조달(28.9%)이라는 응답 결과처럼 귀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귀촌자금의 사용내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규모의 소요자금이 주로 귀촌초기 영농활동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농지마련지원(24.0%), 농가주택지원(13.1%), 영농기술지원(10.6%), 영농교육지원(4.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기술교육지원을 가장 원한다는 조창완 등(2007)의 연구와는 달리 영농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영농자금과 농지, 주택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철규 등(2011)의 연구는 지자체와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귀농귀촌인들이 도움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5.2%)는 정부지원의 현실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즉 농촌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영농활동 대신 도시생활을 하는 귀촌자나 귀촌 후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귀촌동기에 따른 차등 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농산물 판로와 가격안정 및 현실화 그리고 이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이는 연간소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영농소득의 영세성 때문으로 귀촌자들은 소득수준 향상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민의 농촌지향이주자에게 향후 농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23),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업이외의 다른 부업을 가질 것이다(4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연간소득이 1천만원 미만(42.8%)인 영세농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가 27.2%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본업인 농사에 종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겸업농으로서 부업을 통해서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창완 등(2007)은 연구에서 전남지역의 전업농가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겸업농가 비중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한다(12.5%)는 도시근교 거주자들(12.3%)의 응답결과로 생각되며 이른바 ‘무늬만 귀촌자’층으로 분류된다. 이를 강대구(2007)의 연구는 귀농동기에 따른 귀촌자의 분류에서 ‘이상추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이상추구집단’이란 적응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비하여 실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여 소득도 낮고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거주만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농업소득이 충분하지

표 22. 영농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단위: 명)

구분	영농자금지원	영농기술지원	영농교육지원	농가주택지원	농지마련지원	기타	계
빈도	157	39	16	48	88	19	367(100)
(%)	(42.8)	(10.6)	(4.4)	(13.1)	(24.0)	(5.2)	

표 23. 미래 농촌에서의 생활방향

(단위: 명)

구분	농업에만 종사	농업주업, 농업이외 부업종사	농업이외 직업종사, 농업부업	농업이외 직업종사, 농촌거주	이농예정	계
빈도 (%)	100 (27.2)	149 (40.6)	56 (15.3)	46 (12.5)	16 (4.4)	367(100)

못하며 비농업분야의 기대수익이 농업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김철규 등(2011)은 연구에서 이처럼 농업이외의 직업을 갖고 귀촌해 있는 사람들 내에서 귀농성공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조금 높음을 파악하였다. 낮은 소득과 농촌생활의 불편함으로 앞으로 이농하겠다는 응답은 4.4%로 매우 적었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시설투자를 하고 싶지만 지원이 전무하며 금융기관 용자도 받고 싶지만 무담보로 불가능하고, 신용대출도 제한적이라 용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즉 이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해 탈농을 고려하는 층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들은 영농자금대출자격조건이 미흡하거나 대출방법 무지 등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와 생명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면 이들의 탈농 고려는 미연에 방지 및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에 의해 이촌향도현상이 사회적 추세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완만하지만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귀촌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귀촌동기와 유형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지향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이 어떤 동기와 특성을 가지고 귀촌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서는 귀촌동기를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이상적인 삶과 쾌적한 환경 때문으로 응답한 것과는 달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은 경제

적 문제와, 영농기술문제, 농지확보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귀촌자의 영농자금 지원은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정부지원책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농자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 귀촌의 파급력은 경제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영농자금지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자금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활동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출시기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대출이 이뤄지는 까다로운 기존의 금융권은 귀촌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귀촌자들 중에는 경제적 여유가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기존의 사금융권과는 다른 공익적 성격의 가칭 ‘영농마을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농마을은행’을 통해 일정수준의 영농기술과 체험을 거친 귀촌자에게 다급한 소액의 영농자금대출을 귀촌단계별로 적기에 무이자 혹은 장기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 때 정부는 ‘영농마을은행’에 대해 기존 금융권이나 사채와는 다른 금융정책과 세제상 우대혜택을 배려한다면 귀촌의 촉진과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 본다.

영농초기에 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이웃독농가였던 것처럼 추측컨대 영농기술교육을 원치 않는 이유로도 기존 농부들의 영농경험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농부마다 영농기술이 상이하므로 실패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영농지식과 기술을 정보화의 발달로 대중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음을 볼 때 매체를 통한 첨단영농기술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체계적인 검증 거쳐 개량 발굴된 영농기술을 귀촌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탑재는 물론 국영(國營)귀촌전문 케이블 방송을 설립하여 홍보한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를 중심으로 귀촌관련방송프로그램을 상시 편성 운영하는 방안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용한 홍보는 귀촌의 안정과 귀촌농가의 가속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영농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이며 질적인 AS관리체계가 정책차원의 대책으로 요구된다.

귀촌자들은 농지문제를 귀촌자금사용처, 애로사항, 정부지원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농지확보문제를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보유농지가 부족한 귀촌자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농지임대를 적극 강구하는 것이다. 즉 부채지주농지나 재촌지주농지, 무단 방치된 토지, 국유지 등을 최소 5~7년 이상의 장기적인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나 무상활용 등의 방법으로 농지임대방안을 강구한다면 귀촌안정과 유인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전국적인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률이 절반을 넘어 나름의 귀촌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도시민의 농촌지향이주자에 대한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농촌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농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국가적 핵심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 이와 같은 동향과 특성을 기초로 세밀한 도시민의 농촌지향인구의 정착방안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헌

강대구, 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고성준, 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승덕, 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분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김재홍, 1998,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 25(1), 138-147.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박광주·김양희·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준비 및 농촌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박광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경, 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규선·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서만용·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45-171.
 송용섭·황대용, 2010, 귀농·귀촌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2010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95-121.
 신윤철·김동섭·배성의·윤준상,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 특성 분석, 산업개발연구, 6, 59-70.
 신정수·이병오, 1999, 귀농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논문집, 3, 27-53.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년~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우중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 이재철·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개발 및 활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대영, 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웅·김성수·이채식·고운미·김정욱·강정욱,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철영, 1998,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6.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영, 2008, 충청남도 유·출입 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2), 33-46.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34, 42-47.
- 조창완·김희승·서정원, 2007, 전남지역 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전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Amcoff, J. and Westholm, E., 2007, Understanding rural change-demography as a key to the future, *Futures*, 39(4), 363-379.
- Copus, A, Hall, C., Barnes, A., Dalton, G., Cook, P. and Weingarten, P. *et al.*, 2006, *study on employment in rural areas, Brussels: commissioned by DG Agriculture, Aberdeen: SAC.*
- Johnson, K. M. and Fuguitt, G. V., 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Rural Migration Patterns, 1950~1995, *Rural Sociology*, 65(1), 27-49.
- Stockdale, A., 2006, Migration: Pre-requisite for rural economic regener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22(3), 354-366.

(접수: 2011.12.23, 수정: 2012.1.27, 채택: 2012.2.25)